

I. 2023년 재정 여건과 전망

1. 2023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

1 세입여건

- (자체수입) '코로나19'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
 - (지방세) '코로나19'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,
 - 물가상승,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
 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- (이전수입)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, '코로나19' 전개 양상,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 위험도 존재
 -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
 - 다만, 최근 '코로나19' 재확산 추세,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 상존

2 세출여건

- (지역경제)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
 - 에너지·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 -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,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
 -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
- (인구변화 대응) 복지 수요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
 - 인구감소, 저출산·고령화 및 농·어촌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
 -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,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
 -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, 강소 도시 육성 등 인구 유입·정착을 유도하고, 낙후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- (경제구조 전환)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성장 기반 확충
 -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반 조성
 - 현시점 지역 산업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·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다양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

□ (세계경제)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

- OECD와 세계은행(WB)은 '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.3%, 2.9%로 기존 대비 $\Delta 1.5\%p$, $\Delta 1.2\%p$ 하향 조정(OECD·WP, '22.6.8)
 -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(OECD, '22.6.8)
 - 정책여력·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 속도는 상이(OECD, '21.5.)
- ※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19) 2.0 ('20) 1.3 ('21) 3.7 ('22) 8.8 ('23) 6.1

□ (국내경제) 민간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

- 국내경제는 ('22년) 2.7%에 이어 ('23년) 2.4%, 성장할 것으로 전망,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$\Delta 0.3\%p$, $\Delta 0.1\%p$ 하향 조정(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'22.5.26.)
 - ※ '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(%) : (IMF('22.4.)) 2.5, (OECD('22.6.)) 2.7, (한은('22.5.)) 2.7
 - *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.7%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(한은, 7.13)
-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,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
- 다만, 주요국 성장세 약화·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
- 특히,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'22년 소비자물가는 4.5% 상승 전망

2. 2023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

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

민생 경제 회복과 '지방시대' 구현을 위한
효율적 재정운용(재정운용)
선택과 집중을 통한
지방재정 운용 효율화

- ① 지방자치단체 전략적 재정운용
- ② 지방재정의 건전성·지속가능성 제고
-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
-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
- 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순차 개통(예정)

(방향1)
지역경제 활력 회복

- 1-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
- 1-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- 1-③ 민생경제 안정 지원
- 1-④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

(방향2)
지역사회 안전망 강화

- 2-①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2-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
- 2-③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2-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

(방향3)
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

- 3-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
- 3-②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
- 3-③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

3.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

1 재정여건

- '23년 세입은 경제성장 및 세입 확충 노력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,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
- (자체수입)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, 불확실성 상존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신장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
- (이전수입)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축소 전망되며, 일자리 창출, 복지지출 등으로 세출요구는 증가하나, 국고 부족으로 보조금 배분액은 감소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 가중 예상

2 세출전망

-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 크게 증가할 전망
- (지역경제) 소상공인·자영업자, 농가 소득증대, 공공일자리 확대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
- (복지지출) 기초연금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군비 부담도 대폭 증가 예상
- (혁신성장)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공약사업, 주민숙원사업 등 미래 성장 및 지역 균형 투자 확대
- (생활안전)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,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

3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

- 전략적 재정 운용
- (효율적 본예산 편성)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되,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
- (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)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적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
- 지역경제 활력 회복
- (민생 경제 안정 대책 마련) 자영업자·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
- (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확대) 중소기업 등 융차지원 강화, 유망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
-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
- (저출산·고령화 대응) 출산 지원 및 아동·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결혼·출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투자 강화
- (양극화 심화 선제 대응) 청소년,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
-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
- (생활SOC 등 투자 확대)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, 지역 내 낙후·소외지역에 대해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문화 등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